

북한 외교: 현상과 본질

남문희 / 「시사저널」 국제부 기자

북

한 잠수함 사건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정설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혹자는 정찰 활동중 표류했다고 하기도 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의도적 침투 행위로 이를 규정했었다. 그러나 그 어느 쪽도 만족할 만한 답변은 못 되었던 것 같다.

필자는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 사건의 발생 내막에 대해 들을 기회가 있었다.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서방 소식통으로부터였는데, 그는 북측 관계자로부터 들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전해줬다. 북한 잠수함이 한국 동해안에 접근한 이유는 이미 보도된 대로 한국에 침투해 있던 고정 간첩의 복귀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접선하기로 한 시간과 장소에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아 하루를 지체하게 됐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즉, 예정보다 하루를 지체하게 됨으로써 미리 배정받았던 연료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북한 국내의 원유 부족의 여파는 군에도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다. 결국 적지 침투 임무라는,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잠수함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예정된 스케줄에 꼭 맞는 만큼만 기름이 주어진다. 예상외로 하루를 초

과하게 된 잠수함 승조원에게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연료를 절약할 요량으로 엔진은 모두 끄고 비상 대기 상태에 들어갔는데, 여기서부터 사건이 발생했다. 즉, 엔진을 꺼버렸으니 잠수함이 파도에 휩쓸리게 되었고 이 와중에서 바닥에 처박혀 움직이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 소식통은 이런 얘기 끝에, 잠수함 사건은 김일성시대 북한과 김정일시대 북한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김일성시대라면 만나기로 한 시간과 장소에 고정 간첩이 나타나지 않으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지체없이 복귀하게 되어 있다. 과거 빨치산 투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김일성은 이런 점에서 매우 단호했다.

그러나 김정일시대에는 중간 단위의 융통성이 더욱 많아졌다. 김정일예의 충성심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과거에 비해 관료화의 폐해가 심각해질 소지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아무리 유류난이라고 해도 적지에 침투하는 잠수함에 여유분의 기름을 주지 않은 것도 군 내부 관료화의 소산이라고 한다. 또한 현장 지휘자의 재량권이 넓어지다보니 과거

같으면 즉각 철수했을텐데 하루를 미루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잠수함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김정일시대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그는 지적했다. 우선 사태 초기에 김정일은 진상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군부 책임자로부터 제대로 보고를 못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상을 파악한 이후에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진일보한 대응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같으면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발뺌했을 것이나 이번에는 이를 부인하지 않았고, 승조원들의 시신을 돌려달라고 적극적인 요구도 해왔던 것이다.

잠수함 사건은 보다 다른 측면에서 김정일시대 외교의 특징을 극명하게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떤 위기라도 결국에는 기회로 활용하는, 매우 실리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잠수함 사건이 터지자마자 북한은 한때 국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었다. 바로 직전에 열렸던 나진·선봉투자세미나의 열기도 꾀꾀 얼어붙었다. 그러던 것이 연말의 북미 접촉에서는 사과라는 대과를 치르기는 했지만 북미고위급회담의 길을 터놓았고, 한편으로는 카길社의 50만 톤 쌀 공급이라는 반대 급부를 얻어낸 것이다.

돌발적으로 발생한 위기를 파국으로 이끌지 않고 새로운 기회로서 활용한다는 실리주의적 태도는, 지난 2월 12일에 발생한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의 망명 사건에서도 극명하

게 드러난 바 있다.

황 비서의 망명 사건 역시 아직 그 망명의 동기나 과정에 풀리지 않은 의혹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그 구체적인 과정보다는 황 비서가 망명에 이르게 된 북한 권력 내부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군부와의 갈등이다. 황 비서는 지난해 초부터 군부와 일정한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노선 갈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핵심은 경제난과 군사비 지출간의 함수 관계에 대한 이견이다. 주체재단을 통해 해외 학술회의 참석 경험이 많은 황 비서는 해외에서 만난 미국, 일본, 한국 등의 학자로부터 한·미·일 3국이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얘기를 계속 듣게 됐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막대한 군사비 지출의 타당성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특히, 경제난·식량난으로 인해 '인민'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전쟁 위협도 없는데 구태여 100만 군대나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품게 됐다 한다. 황 비서는 지난해 2월의 모스크바학술회의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조를 피력하다가 북한 군부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받았고, 이로 인해 지난해 4월부터 군의 견제로 황 비서가 위태롭다는 정보가 국내에 입수되기도 했다.

군부와의 갈등이 하나의 요인이라면 또 하나의 요인은 김정일시대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김정일 측근 실세 그룹과의 마찰이다. 북

한은 지난해 말부터 대대적인 당·정·군 개편을 추진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주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김정일 측근 인사들이 새로운 실세 그룹으로 대거 등장했다. 이들의 입장에서 황 비서와 그의 주체사상은 김일성 시대의 것이고, 김정일 시대에는 이미 낡은 사상으로 치부돼왔던 것이다. 즉, 이런 신 실세 그룹들에게 황 비서는 이미 낡은 시대 인물로 용도 폐기됐던 것이다.

망명의 구체적 계기가 됐던 것은 연말부터 불어닥친 당·정·군 인사에서 황 비서가 이미 현재의 자리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황 비서 스스로도 돌아가면 자신도 위태로울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어차피 돌아가서 밀릴 바에야 망명의 길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황 비서의 돌연한 망명 직후 북한은 이를 한국의 납치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곧바로 “변절자여 갈테면 가라”며 태도를 돌변했다. 북한의 이같은 갑작스런 태도 변화의 배경에는 미국을 주축으로 한 국제적 설득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황장엽 망명 다음날인 2월 13일 뉴욕에서 마크민튼 국무부 한국 과장이 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 공사와 만나, 이 사건에 집착해 공연히 힘빼지 말고 차라리 이를 국제적 식량 원조의 계기로 활용하라고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황 비서의 망명을 허용하면 한국을 설

득해 한국 쌀의 북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한국이 더 이상 일본 쌀의 북한 지원을 막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이 이처럼 발빠르게 북한 설득에 나선 이유는 한국 정부가 황 비서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황장엽 사건을 미국연락사무소의 평양 진출을 지연시킬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또한 대북 쌀지원과 관련해 들쭉들쭉하던 일본을 눌러 앉힐 카드로도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이 황 비서 사건을 장기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을 시도했으며, 여기에 북한측의 실리 추구적 자세가 더해져 곧바로 ‘3者설명회 및 북미고위급회담’ 타결이라는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결국, 황 비서 사건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대북 쌀지원을 유보했던 일본만이 어정쩡한 입장이 되고 말았다.

미국과 북한이 황장엽 사건에 대응해나가는 모습을 보면, 현재 양국 관계의 밑바탕에는 어떤 돌발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올해 안에 달성해내야 할 모종의 스케줄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스케줄이 존재하기 때문에, 스케줄 밖에서 터지는 돌발 변수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순발력있게 처리하면서 결국은 기본 스케줄로 다시 복귀하게 되는 것

이다.

황장엽 사건 직후 북한과 미국이 일련의 실무 접촉을 통해 제시한 3월 5일의 3者설명회와 3월 7일의 북미고위급회담 역시 그 한 예이다.

우선, 3者설명회는 한국에 대한 유인책 및 북한 식량난 해결을 위해 도입됐을 것이다. 즉, 한국에 4者회담이라는 선물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이 북미간의 스케줄을 뒤흔드는 것을 막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이 대북 식량 지원에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북한은 4者회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펼쳐왔다. 북한이 현재 필요로 하는 것은 북미간 직접 대화이지 4者회담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북한은 한 때 중국 역시 한국과 가깝기 때문에, 4者회담이 열릴 경우 한국·미국·중국이 한편이 되어, 3 대 1로 자신들이 불리한 위치에 처한다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이후 식량난 해결을 위한 뾰족한 대안이 없고, 한미 양 정부가 4者회담에만 응하면 대규모 식량 지원을 해주겠다고 지속적으로 유혹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필요를 못 느꼈을 것이다. 또한 미국·중국을 주축으로 한 황장엽 사건의 막후 처리 과정에서, 미국이 카길社의 50만 톤, 중국이 작년에 결정한 50만 톤, 그리고 일본이 30만 톤, 한국의 20만 톤 등 합쳐서 150만 톤 정도를 북한에 지원하는 국제적 배분이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도 4者회담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미국과 중국의 지원분은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으나, 한국과 일본은 뭔가 명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것이 바로 북한의 4者회담 수락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두 차례 정도의 회담은 가능하리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4者회담의 성공적인 결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북한은 회담 중간쯤 엉뚱한 주문을 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이 바로 남북 대화이다. 한두 차례의 회담 이후 북한은 한국측에 곧바로 남북 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한국 역시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4者회담 국면은 곧바로 남북 대화 국면으로 전환돼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또한 남북 대화 역시 이를 위한 실무 회담 등을 거치게 되면 올해를 넘기게 될 공산이 크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다음 정권에서나 가능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북한의 남북 대화 요구 역시 매우 복합적인 의도를 띠고 있음이 분명해진다.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는 올 7월경 이를 요구함으로써 대선 기간중 불거져나올 대북 이슈를 보다 유화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다음 정권에 대해 대화와 관련한 이니셔티브를 쥔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이 정무원 총리에 연형묵 前총리

를, 그리고 부총리에 김달현 前부총리를 사실상 내정했다는 점 또한 이와 관련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경과 서울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수뇌부가 지난 3월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들은 당분간 수면 하에서 새로운 정책 구상에 몰두하다가 김정일의 권력 승계와 동시에 표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대표적인 대외 개방파이자 또한 대남 경험파이기도 한 두 사람이 지난 1992년 남북 관계가 활성화됐던 때와 똑같은 패턴으로 권력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면, 이는 향후 남북 관계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될 것이다. 또한 이들의 등장 시기가 대체로 7월 전후로 예상된다는 점 역시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다음 정권에 대비한 포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어쨌건 북한 수뇌부가 지난 몇년간의 남북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북한 권력내 대표적 지한파인 이들을 다시 복귀시키겠다는 결정을 했다는 것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올해 안에 미국연락사무소가 평양에 진출하고 이에 수반해 일본의 대북 진출이 가속화되는 등 주변 국가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 의미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연락사무소의 평양 진출 문제는 지난 3월 7일의 북미고위급회담에서 매우 심도 깊게 다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되나, 그 이후 어떤

일인지 일체 얘기가 안 나오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이제 시기 문제만 남았을 뿐, 더 이상 양측 사이에 실무적인 문제는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북미연락사무소의 상호 교환은 한반도의 평화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남북 관계가 이처럼 악화된 상태에서 미국의 연락사무소가 들어간다는 것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불균형의 심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다.

따라서 비록 다음 정권의 일이 될 것이라 해도 연형묵, 김달현 같은 인물이 정무원 총리, 부총리로 등장하게 된다면, 이같은 우려도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두 사람이 전면에 복귀한다는 것은 북한 역시 자신들의 경제 재건 과정에 남한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남북의 경제 협력 활성화도 기대해볼 만하기 때문이다. **統**